

“낙태허용” 국민82% 찬성

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 “규제 강화해야” 14.1%뿐

우리나라 국민의 80% 이상이 낙태를 허용하거나 ‘미성년자 임신’ 등 임신 사유 등에 따라 낙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런 사실은 한국 형사정책연구원(원장 한영석) 주최로 25일 열린 ‘인공임신중절과 낙태죄에 관한 연구’ 세미나에서 발표된 이 연구원 심영희(한양대 사회학과 교수) 연구실장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.

서울에 사는 15살 이상의 남녀 1천2백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 조

사 결과에 따르면, 대상자의 81.6%인 9백76명이 모든 낙태를 허용하거나 규제를 하되 임신 기간·사유별로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.

또 현행법의 태두리 안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.3%, 낙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답은 14.1%인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조사 대상자의 51.8%인 6백22명이 낙태가 형법에 범죄로 규정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